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예비인증 심사 ‘촉각’

29일까지 의학교육평가원 신청 연말 교육부에 통합신청서 제출 신설·정원배정 확정후 심사 진행 범도민추진위, ‘설립 지원’ 결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신설인가, 정원 배정과 함께 의대 설립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예비인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오는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의대 신설 시 개교 1년3개월 전까지 예비인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어 양 대학은 올해 연말까지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3월 말까지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하게 되며 의평원도 예비인증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 5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0여 의대를 비롯해 2026학년도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남 통합의대 입시 전형도 이때 공개되고, 2026년 3월 개교와 함께 첫 신입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하철(왼쪽 두번째) 목포대학교 총장 등이 19일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현안업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생을 받을 수 있다.

예비인증 심사는 의예과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16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기본 진료역량과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한 대학의 사명(使命)을 비롯해 △졸업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입학정책 수립·시행 △특별전형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 △기숙사 운영 △의학교육 담당기구와 전임교수 확보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 시설 △학생 복지·편의시설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관리 인력과 적절한 예산, 학장과 보직자 책임 명시,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 적정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 확보

등도 필수조건이다.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예비인증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통합의대 추진과 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목포대-순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양 대학 ‘통합 합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통합 전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1도 1국립대 정책을 지향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느슨한 통합모델’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전남 통합대학이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등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병운(왼쪽 세번째) 순천대 총장 등이 19일 순천대에서 열린 국립순천대학교-전남도 현안업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육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라며 “이후 양 대학에서 29일까지 의평원에 예비인증평가 신청, 12월 말까지 ‘대학통합신청서’ 정부 제출 등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이날 전남도청에서 집행위원회 7차회의를 열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과 통합의대 합의를 환영하며 통합의대 설립 지원에 매진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민의 뜻을 하

나로 모아 지역 역량을 집중, 전남도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반이 될 통합의대가 성공리에 설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추천 이후에 정부가 의대 설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범도민추진위도 역량을 하나로 모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호남향우회, 이통장연합회,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전남어린이집연합회, 전남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성명과 입장문 등을 통해 통합의대 설립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여가부 ‘여성친화도시’에 목포·나주 추가 선정

전남도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에서 목포와 나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 역량을 강화하며,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전, 돌봄, 여성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해 선정한다.

목포시는 △목포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사업 △안전모니터링 및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 △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

△시민참여단의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장비 지원 사업 △여성친화마을 안전지도 제작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하는 시군을 발굴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 지원, 여성가족부의 지정심사 대비 전문가 컨설팅 등 시군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교육부 “통합의대 추진, 통합대 지위 먼저 확보해야”

“지역사회서 방법 모색해 오면 지원” “의대 증원 문제, 복지부와 협의 필요”

교육부는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대학 통합에 합의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방법을 모색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 열망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의대 증원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해 논의해야 한다며 의대 신설까지 얼마나 걸릴지 확실하지 않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은 브리핑을 마친 뒤 ‘목포대-순천대의 통합부터 의대 신설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오 차관은 “우선 학교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 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도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마련돼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합대의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말했고, 정부에서 계속 확인하

고 있듯 지역사회 내에서 방법을 모색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의대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신설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선적으로는 통합대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에서 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도 컨설팅을 비롯해 과정, 과정 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때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무안-도쿄 진에어(JIN) 정기편 취항 확정!
도쿄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JIN AIR 문의/예약 : 1522-1901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팀(1인 ¥3,000), 매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